

재보선 참패 대선 '경고등' ... 당·정·청 '인적쇄신' 돌입

청와대, 정무라인 교체 ... 정부, 경제부총리 등 중폭 개각 가능성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16일 원내대표·다음 달 2일 대표 선출

여권 대선구도 변화 ... 이낙연 선대위원장 입지 크게 좁아져
이재명 지사 유력 주자 떠올라·정세균 총리 행보 새 변수로

4·7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정국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민심 이반을 확인한 여권이 과연 어떠한 반성과 쇄신,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대로는 여권의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민심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면〉

당장, 당·정·청은 인적쇄신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4·7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혀, 국정 운영에 있어 민생 정책을 우선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 사의를 밝힌 참모는 없으나 경제라인 개편에 이어 최재성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이 교체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의를 기점으로 중폭 규모의 개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도 이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또 오는 16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다음 달 2일에는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5월 중순경으로 예정됐으나 한 달이나 앞당겨졌고 전당대회도 내달 9일에서 1주일 먼저 개최된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까지는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시간을 끌수록 선거 참패의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철과 쇄신의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정·청의 인적쇄신이 과연 민심의 눈높이에 맞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쇄신이 기존의 전·현직 국회의원 중심의 돌려막기 인선에서 벗어나고 민생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쳐낼 것인지 주목된다. 또 민주당이 과연 친문(친 문재인) 주류의 일방적 구도에서 탈피, 당을 결집시킬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쇄신 및 민생정책이 표류하고, 민주당이 지도부 선출과 대선 후보 경선 시기 등을 놓고 소모적 노선·진영 논란에 휩싸일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되고 여권의 정권 재창출 길은 험난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양강 구도로 형성됐던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여권의 '무능과 오만'에서 비롯됐지만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패배의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위원장의 지지율도 한 자리 수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한 부재 측면에서 여권의 유력 주자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권의 참패는 이 지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당내 친문·주류 세력의 이 지사에 대한 비토 정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조만간 제3주자로 나선 정세균 총리가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면 전환 논란도 있겠지만 개헌 문제도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여권의 위기 상황에서 호남 민심과 광주·전남 정치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진 상황에서 호남 민심의 정권 재창출 열망이 여권의 쇄신 드라이브와 맞물려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남 민심의 움직임과 함께 그동안 정치적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광주·전남 정치권이 결집, 여권의 정권재창출 전선의 선봉에 서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유채꽃 사이로 노란 봄을 걷다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황룡강 친수공원을 찾은 상춘객들이 만개한 유채꽃 사이를 걸으며 봄날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실로 드러나

경찰, 시청·서구청 등 6곳 압수수색
개발정보 이용 시세차익 정확 확보

광주시 전·현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 경찰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땅을 매입한 전직 공무원의 투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한 뒤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뒤 나온 이렇듯 경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광주시 감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8일 광주시청과 종합건설본부, 서구청, 광산구청 등 행정기관 4곳과 전직 공무원의 자택 등 개인 주거지 2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전직 공무원인 A씨가 광주시의 도로 개

발 계획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 2017~2018년 해당 부지 인근 수석역원 규모의 부지 3개 필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챙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들인 토지는 실제 개발로 이어지면서 일부 보상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부패방지권위법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 외에도 산정지구를 비롯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 10여 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서구도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구 안팎에서는 A씨가 서구 공무원 등을 통해 건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자신의 쌍촌동 땅을 건설업자에게 팔아 수석역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 과정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 정황이 흘러나온다. 경찰도 서구 퇴직 공무원을 관련 사건 피의자로 입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 광주시가 성급하게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서울시장 오세훈·부산시장 박형준 당선

4·7 재·보궐선거가 여권의 참패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동시에 탈환했다. 8일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가 62.67%로 민주당 김영춘 후보(34.42%)를 더블스코어 가까이 앞섰다. 공휴일이 아니었음에도 투표율이 서울 58.2%, 부산 52.7%를 기록했다. 울산 남구청장(서동욱), 경남 의령군수(오테원)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광역·기초의원 재보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에서 당선됐다. 나머지 광주, 전남·북 4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경남 의령군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하남산단 작업복 전용 세탁소 가보니 ▶6면
복스 - '조선 왕실 풍수문화' '게임 인류' ▶14·15면
KIA 루키 이승재에게서 윤석민이 보인다 ▶18면



"떨감처럼 다 태워야 되겠습니까?"

창의적이고 품요로운 광주
광주대한민국
두, 마래로!

내가 버린 담배꽂초와
무분별한 취사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 성냥, 라이터는 두고가고!
- 취사대신 도시락을 즐기고!
-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